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 및 지원사업 종합평가

Evaluation of KOICA's Country Assistance Programme for Indonesia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¹⁾

목차

- I. 평가개요
- II.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III.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
- IV. 대 인도네시아 CAS 개요
- V. 대 인도네시아 CAS 평가
- VI. 종합평가 및 제언

I. 평가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인도네시아는 ASEAN 지역 중심국가로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우리정부와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된 이후 교역, 투자, 인적교류, 관광자원 협력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

KOICA는 인도네시아에 1991년부터 2008년 까지 7,962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에 시행되는 사업규모는 1,505만 달러 정도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제외 시 우리나라 최대의 무상원조 공여대상국으로 KOICA의 중요한 개발협력 대상국의 하나

1)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평가실 우동완 직원 요약·정리

로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영역이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의 효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KOICA의 인도네시아 지원전략 및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 평가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이하 CAS)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전략 및 지원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2004~2008년간 지원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파급 효과 등을 파악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유사 사업 수행에 활용 가능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평가방법

CAS의 평가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반구조화 인터뷰, 설문조사, 그룹토의 등이 사용되었다.

3. 평가기준 및 범위

동 평가는 평가대상에 따라 OECD/DAC에서 권고한 5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CAS에 사용된 평가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표 1〉 CAS 평가 매트릭스

평가 대상	평가 요소		조사 방법
	요소	세부 항목	
국가지원전략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ODA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 및 적절성 • 인니 개발 수요 및 전략과의 적절성 • CAS 체제 및 내용의 적절성 • 원조 프로그래밍, 사업 실시 기법과 체제의 적절성 • 전반적인 원조 효과, 효율성 및 파급 효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책 및 전략 문서 분석검토 • 삼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KOICA, 한국정부, 인니정부) • 현지평가 워크숍
	여타원조 공여자와의 차별성 및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의 정체성 및 일관성 • 유상 원조(EDCF) 사업과의 조화 및 연계성 • 주요 원조공여자와의 차별성 및 조화 (JICA, DFID, AusAID 등) • KOICA의 강·약점과 Good Pract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자료 비교 분석 및 검토 • 관계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국제원조 규범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Gs 달성에 대한 기여 • PD(Paris Declaration) 합의 이행여부 • AAA(Accra Agenda for Action) 합의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조사평가 결과 분석 검토 • 관계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II.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1. 역사·문화적 배경

300년이 넘는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투쟁과정을 거쳐 연방국가 형태로 독립하였다. 1960년대 중반 공산 쿠데타로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신정부질서(New Order Government)’라는 정부형태와 국민협의회라는 독자적인 통치 구조를 채택하여 1990년대 후반까지 독재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지속되었다. 이후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통해 비교적 순조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민주적인 정부에 의한 통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2004년에는 최초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통령 선출, 2005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해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이체해방운동군(GAM)간의 분쟁이 종식되어 범국가적 통합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2004년 선출된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 선거에 재당선 되어 5년 임기의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분권화(Decentralization) 시책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또한, 부정부패 해소,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향상을 국정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 경제·사회적 배경

인도네시아는 큰 국토, 2억 명 이상의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국가임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어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전까지는 권력의 집중과 1인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정부패, 파벌주의, 밀실주의 등의 폐해가 발생했으며, 부의 집중과 편재, 계층 및 지역 간 개발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 말 부터는 민주화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안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거시경제 안정, 부정부패 근절, 거버넌스 향상, 성장촉진, 빈곤완화, 고용창출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5.8%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2008년에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6.2%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업 및 서비스 산업의 신장에 힘입어 농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2, 3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개선되고 있다.

2008년에는 1차 산업이 14%, 제조업 48%, 서비스업이 3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05년 저소득국(LIC)에서 탈피하여 중소득국(MIC)으로 지위를 향상시켰다. 200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을 넘어섰으며, 2005년에는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과 함께 경제협력기구(OECD)의 초청을 받아,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III.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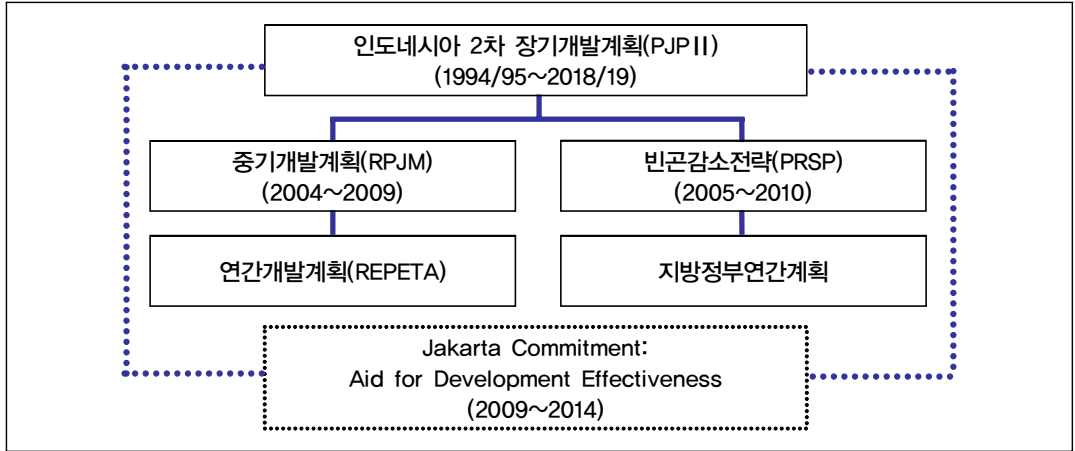
1. 개발전략의 체계

인도네시아 개발과제와 수요는 지속적인 빈곤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빈곤감소 전략(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2005~2010」과 국가 25개년 장기개발 계획에 바탕을 둔 「5개년 국가개발계획(RPJM) 2004~2009」를 주축으로 한다. 5개년 국가개발계획은 ①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건설, ②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실현, ③번영된 국가의 실현²⁾이며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및 우선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두 전략과 계획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며 또한 매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연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중·단기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기초가 되는 것은 1994년도에 수립된 제2차 장기 국가발전계획(PJP II 1994/1995~2018/19)이다. 또한 효과적인 원조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협력 파트너 간의 협의와 조정, 원조일치 및 조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틀이 구성되었다. 2009년 1월에는 KOICA를 포함한 19개 주요 원조공여 주체가 참여하는 「Jakarta Commitment : 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Indonesia Road map to 2014」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원조일치 및 조화, 성과중심의 사업시행, 원조 공여자 간의 역할 분담 등을 위한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 번째 목표인 번영된 국가의 실현을 위해 ①빈곤인구 및 실업의 감소, ②지역간 개발격차 축소, ③ 인적개발지표(HDI) 향상, ④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개선, ⑤개발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등이며 특히, 빈곤인구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 우선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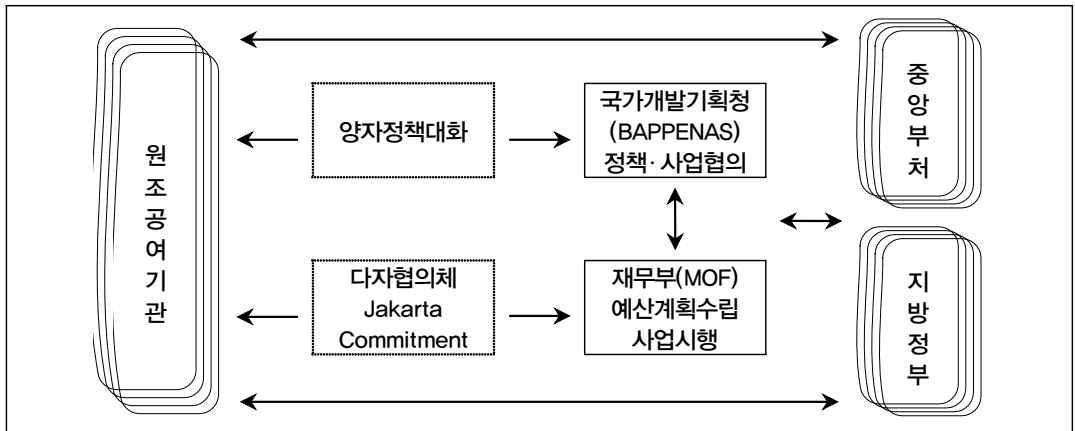
〈그림 1〉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전략 체계



2. 수원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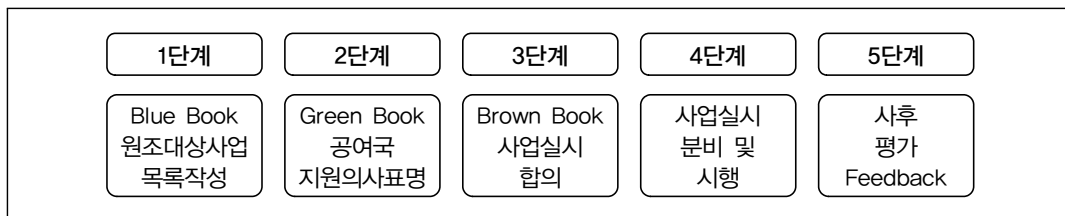
2006년 10월에 강화된 원조관리 지침(대통령령 NO.2)에 따라 대외수원사업 총괄기관인 경제개발 기획청(BAPENAS)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정책협의 및 사업요청 등 사업 준비는 경제개발기획청 (BAPENAS)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담당한다. KOICA는 공식적인 정책 대화 장치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연수생초청사업과 봉사단파견사업은 국가사무처(SETNEG) 기술협력국(Bureau for Technical Cooperation)을 통하여, 프로젝트형 사업은 경제개발기획청의 양자해외재원조달국(Directorate of Bilateral Foreign Funding)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림 2〉 인도네시아의 수원 체제



인도네시아는 2006년 ‘대외원조 개혁안’ 시행 이후 Blue Book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원조공여기관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후 해당 사업을 Green Book에 등재하여 원조사업으로 추진한다. 최종 추진방안이 확정된 사업은 Blue Book에 등록하여 예산분담계획의 협의 및 정부 예산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친다. 사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 KOICA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3〉 개별 협력사업 추진 절차



IV. 대 인도네시아 CAS

1. 인도네시아 CAS 수립 배경 및 체계

1991년부터 KOICA를 통해 100개 국가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와 분야의 무상 원조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요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개별 원조지원전략을 수립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상원조지원은 2007년 동 국가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 매년 수립·시행되는 무상원조사업계획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국무총리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³⁾가 설치되어 범 정부차원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무상·유상 원조 정책과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사업을 위한 조치가 도모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7월에는 「ODA 중기전략」을 수립하였다.

외교통상부는 「ODA 중기전략」의 시행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무상원조 중점 협력대상국에 대한 국가지원전략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무상원조 대상국을 56개 국가로 집중하고 이를 중점

3)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의 관계부처 장관 및 ODA 실시기관 대표(KOICA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참석하며 그간 5차례의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연간 ODA 추진계획, ODA 중기전략, 중기 ODA 확대목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개별지원전략(CAS) 수립, ODA 선진화 추진(ODA 통합평가, 기본계획 및 통합 CAS 수립, 비구속성 원조) 등을 의결하여 추진하고 있음.

협력국과 일반협력국으로 분류,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2. 인도네시아 CAS 수립 방식 및 절차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은 「ODA 중기전략」과 「무상원조 중기전략」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었다. 인도네시아 개발과제 분석, 무상원조사업 평가 및 교훈, 무상원조사업의 목적·지원방향·중점지원 분야 등 크게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지원전략의 수립은 외교통상부의 잠정적인 내부 지침에 입각하여 국가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문서의 틀이 입안되고 KOICA 해외사무소의 실무적 조사와 검토에 입각하여 초안이 마련되었다. 동 전략의 골격은 타 공여기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수립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수립기간은 약 2개월로 내부적인 절차만으로 작성되어 원조 전문역량이나 지역 전문역량을 지닌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원국 개발수요 분석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과정이 수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가지원전략에 대한 상호 협의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수원국과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도네시아 CAS 내용

인도네시아 CAS는 인도네시아의 빈곤 상황에 대한 분석,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개발계획 및 당면 개발과제, MDGs 이행현황의 파악을 통해 무상원조사업의 추진 목적, 기본목표, 사업실시 방향, 중점지원분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개발 목표 및 지원 방향
원조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을 통한 빈곤감축
지원목표	(1) 경제·사회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철도, 도로, 항만, 댐 등 인프라, 전력 및 에너지, ICT 및 전자정부 분야 개발조사사업 (2) 안적자원개발 및 능력강화 지원 - 경제 및 재정, 재난 관리, 기타 공공분야에 대한 우리의 개혁 경험 전수로 전반적인 관리 역량 강화 (3)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생태관광 기술전수 등 산림보전, 우량 임목종자 개량 등 지원
사업 추진방향	(1) 선택과 집중 원칙을 통한 원조 성과 제고 - 칼리만탄, 수마트라 지역의 인프라/자원연계 사업 우선 (2) 양국 경제협력과 연계 지원을 통한 궁극적인 인니 개발 목표 달성 기여 - 전력 및 에너지, 도로·항만·댐 등 인프라 개발, 자원개발, 전자정부 분야 개발 선도적 역할 (3) 수원총괄기관과의 정책대화 및 타 원조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중점지원 분야	(1) 산업·에너지 - 지역개발전략 수립, 자원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송·배전 효율화 방안, 원자력 분야 기술연수 등 (2) 정보통신 - ICT 훈련원 건립, 정보통신 인력 육성 지원, 전자정부 구축 지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3) 행정제도 - 경제개혁, 정부혁신, 사법제도 공무원 연수, 공공기관 역량 강화, 투자 및 수출 진흥, 중소기업 육성, 재난 대응 능력 배양 등 (4) 환경 - 임목 육종 개량, 임목 종자관리 지원, 시험림 조성, 삼림보호 및 생태 관광 기술 지원, CDM(청정 개발 메커니즘) 공동 연구 등
---------	---

V. 대 인도네시아 CAS 평가

1. 타당성

1) 정부 ODA 정책 및 상위 전략과의 연계성 및 적절성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의 마련이 다소 늦은 점이 있으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지원전략이 마련된 것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중기전략에서 무·유상의 2원적 원조실시 체제를 감안하여 무·유상 각각의 국가지원 전략을 별도로 마련토록 한 기본적인 지침에 잘 부합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간 원조지원규모가 1,000만 불 수준을 넘어서면서 보다 체계적인 원조 실시 전략의 필요성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의 방향과 내용 역시 KOICA의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의 기본 기조 및 지향 목표에 충실히 부합한다. 대 인니 국가지원전략은 중기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 목표 중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 기조의 유지, 특히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ASEAN 주요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지역 협력 방향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니 국가지원전략에 나타나 있는 중점 지원 분야는 중기전략에서 비 제시하고 있는 주요 7개 협력 부문 중에서 수원국의 개발 수요, 투자 우선순위 등 인도네시아의 개발환경과 우리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수 개의 전략적 협력 부문으로 특화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 및 지원규모의 제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고도 바람직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2) 수원국 개발수요 및 전략과의 적절성

인도네시아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중 빈곤인구의 절반 감소라는 첫 번째 목표는 이미 달성한 상태이나 ‘빈곤접근(near poor)’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정책과 전략은 빈곤 완화와 성장의 촉진을 통한 지속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KOICA의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에 합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제시되고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보통신, 행정제도, 환경 등 4개 중점지원분야는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개발 목표의 일부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KOICA의 대부분 사업은 중앙정부 및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에 치중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화, 지역균형 개발 추진 측면에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지원전략의 체제 및 내용의 적절성

중점지원분야를 4개 중점지원분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용한 지원 여력 등을 감안 시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 또한 부문중점(Sectoral focus)는 비교적 뚜렷하나, 지역적 중점(Regional focus)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과제 도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과 개발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경제성장의 촉진을 지원하는 원조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가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빈곤감소 목표와의 연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전반적인 국가지원전략 수립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략에 제시된 목표 및 성과지표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가지원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2. 타 원조기관과의 차별성 및 조화

1) 개발차관(EDCF)과의 차별성 및 조화

KOICA의 사업은 인적·기술적 협력 요소가 중심이 되는 중·소규모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사업은 중·대규모의 산업설비 또는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각자의 비교우위요소가 차별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양자 간에 정책 및 업무협의 체제를 통해

역할 분담과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접근 및 시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수립되어있지 않으며 인식 또한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조화를 위해선 통합적인 국가지원전략 등의 마련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개발협력파트너와의 차별성 및 조화

KOICA 및 JICA, USAID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CIDA는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다른 양자 원조 공여국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긴요한 의료보건 또는 교육, 사회 안전 등의 부문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CIDA를 제외하고, 일본과 호주는 평화와 안정, 미국은 지구적 테러 위협의 완화, 영국은 사회적 안전 따위의 과제에 큰 관심을 갖는다. KOICA는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등을 중시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KOICA의 지원 사업이 여타 공여국들의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빈곤완화 대책과 분권화·지역 균형 개발 지원 차원에서 발견 된다. KOICA는 빈곤 소외 계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원조 공여기관들이 지방분권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지방 권한 위임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점도 KOICA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원조 사업의 지역적 중점 역시 KOICA는 여타 양자 간 원조 공여기관과는 차별화 된다. 대부분의 여타 원조기관들이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KOICA의 사업은 대부분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Bogor-Cikarang-Rumpin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3.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에 적절성

1) 새천년개발목표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KOICA의 국가지원전략은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빈곤완화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함께 기본적인 개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 상에 나타나 있는 ‘8대 목표(8 Goals)’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KOICA의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는 ‘목표 7(Goal 7)’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네시아 임목개량 및 현대식 양묘장 조성사업, 인니 열대림 임목종자 관리 및 개발사업, 산림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사업, 한·인니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이 이 분야의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목표 8(Goal 8)’ 개발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KOICA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 2009년 초에 고안한 ‘Jakarta Commitment: 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에 1차적으로 서명한 22개 원조공여자의 하나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파리선언

인니 정부는 2008년 9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원조 효과에 관한 제3차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에 즈음하여 주요 원조공여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원조 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상의 ‘12개 개발지표(12 Development Indicators)’에 대한 이행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는 2009년 1월에 발표된 Jakarta Commitment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이 조사결과는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원조공여국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결과의 유용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인니 정부가 실시한 주요 원조공여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타 원조공여자와 KOICA 모두 수원자 측과 공유하고 있는 명확한 원조실시전략(Oper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KOICA의 경우 굿거버넌스, 환경보호 등의 2개 분야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개발 우선순위와 긴요한 수요를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원조 절차와 기법 등의 면에서는 파리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지표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KOICA의 무상원조사업 중에서 인니 정부의 예산 체계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의 무상원조가 모두 타이드(Tied)되어 있는 관계로 인니의 재정 운용 및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원천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에 추진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프로젝트실행조직(PIUs/Project Implementation Units)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 유사 프로젝트실행조직(Parallel PIUs)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설명해준다. 특히 원조의 예측가능성, 프로그램베이스의 사업추진, 상호 협의된 공동 사업조사단 및 평가단의 구성과 활용 등의 면에서 개발지표상의 목표를 실현하는 문제는 아직 관심 밖의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제언

상기 평가결과로부터 도출된 인도네시아 국가지원전략과 관련된 제언사항 및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언 사항	추진 과제
가. 인니 통합 국가지원전략의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원조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대 인니 국가지원전략의 마련 - 무상·유상 사업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국가지원전략 (Integrated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마련하여 시행 	(1) 인니 국가지원전략을 골간으로 하는 원조 프로세스 정립 (2) 새로운 골격의 국가지원전략 수립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인 원조의 틀(Strategic Aid Framework) 마련, 사업실시 접근방식 및 기법의 제시 - 재원투입계획이 수반되는 연동 계획(Rolling Plan) 수립, 구체적 개발지표 및 사업 성과지표 설정 (3) 무상·유상 통합의 국가지원전략 마련 (4) 연도별 인니 사업추진 계획 (Annual Country Plan/Program)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국가지원전략에 바탕을 두는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국가지원전략 수립 방식 및 절차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적인 국가지원전략으로서의 유용성과 실용성 확보 	(1) 참여적·협리적·실천적 국가지원 전략 수립절차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국가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관계 전문가 참여 체제 구축 - 정례적인 정책대화 및 협의 장치 구축 (2) 국가지원전략 수립 및 운용에 관한 관련 지침 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사업평가지침 내용 보완
다.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AAA 개발지표 및 실행과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강구 	(1) 우리나라 PD/AAA 실천계획(Action Plan)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여건에 알맞은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과제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2) 대 인도네시아 원조효과 제고 방안 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인니 국가지원전략 내용에 포함 -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시행
라. 새천년개발목표(MDGs) 실현에의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름대로 MDGs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적 개발협력 실시 방안 모색 	(1) 우리의 연건과 특성 등을 고려한 대 인니 MDGs 달성 기여 방안 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인니 국가지원전략 내용에 포함